

광주, 인구대비 병원 '전국 최다'...병상 공급 제한

10만명당 한방병원 전국 평균 5.5배 과잉 진료·의료비 상승 등 유발 요인 의사 등 의료인력 전국 최하위 수준 시, 지역 맞춤 병상수급·관리 계획

광주시에 과잉 진료와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병상 초과 공급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병상 수급관리제에 나선다.

광주시는 '제3기(2023-2027년) 병상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병상 수급 기본시책'에 근거해 수립된 제3기 병상 수급·관리 계획은 지역 맞춤형 병상 신설과 증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다. 광주시는 이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병상 수를 지역 수요에 맞게 관리하고, 합리적인 병상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광주 지역은 인구 대비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의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병상 대비 의료인력(의사·간호사·한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병상이 과도한 실정이다.

광주 지역 병상 수(2023년 기준)는 3만7163병상으로, 상급병원 1865개, 종합병원 5236개, 일반병원 6581개, 요양병원 1만3753개, 한방병원 5835개 등이다.

시가 오는 2027년 기준으로 진료권별 병상 공급 및 수요량과 수급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병원은 약 8200~9800병상, 요양병원은 약 6200~7400병상, 한방병원은 약 1700~28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023년 기준 광주 지역 인구 10만명 당 한방병원 수는 6.1개로, 전국 평균(1.1개)보다 무려 5.5배 많다.

특광역시 한방병원 수를 보면 광주가 87개로 서울 85개보다 많다. 이어 인천 45개, 부산 26개, 대구 18개, 대전 17개, 울산 6개, 세종 3개 순이다.

이에 광주시는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병상에 대해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 기본시책에 따라 신규 병상 신설 및 증설을

제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기본시책에 따르면 병상 공급 관리 대상은 일반병상과 요양병상만 해당하지만, 광주시의 경우는 한방병상이 과다해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광주 지역의 한방병상 수는 5835병상으로, 전국 한방병상 수(3만4929병상)의 16.7%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역 한방병상의 과잉 수준이 타 광역시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확인돼 한방병상의 관리대상 포함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응급·반만·소아·공공분야 등 필수 의료 병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2023년 9월부터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 실무전담팀(TF)'을 구성해 병상수, 의료수요, 병상가동률 등의 료자원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과 보건복지부 심의 등을 거쳐 지난 2월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오는 29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정영화복지건강국장은 "병상수급관리 계획 시행으로 추가적인 병상 공급을 억제하는 등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균형있게 고려한 병상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성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전남도, 신개념 산불방지종합대책 추진

관계기관과 협력 회의

전남도가 산불 예방과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개념 산불방지 종합대책 관계기관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울산·경북·경남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국내 최대 피해가 발생한 엄중한 상황에서 도 차원의 선제적이고 입체적인 산불 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최근 산불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는 등 기후변화 영향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대다수 전문가들은 기존 방식으로 산불을 진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에 따라, 새로운 산불예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도는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20여 명과 서부지방산림청, 전남도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 등 산불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강영구전남도도민안전실장은 "이제는 기존 산불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신개념 전략이 절실하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이후 도·시군 전 직원이 주중과 주말 산불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민을 대상으로 실시간 마을 방송과 재난문자를 발송해 산불예방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오지현 기자



2025년 국가중심 제1차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2025년 국가중심 제1차 국·공립대 총장협의회가 10일 목포대학교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운영

올해 30명 선발 지원금 지급

광주시가 미래 청년농업인을 키우는 '202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의 안정적 정착을 도와 미래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 지원금을 지급해 자립형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올해 사업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8억 5143만원으로, 대상자에게는 3년간 최대 3600만원(연차별 차등지급)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1년 차 110

만원, 2년 차 100만원, 3년 차 90만원이 매월 지급된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총 3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상반기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아 면접 등을 거쳐 4월 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상반기에 선발된 대상자들은 5월부터 3년 간 정착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영농 정착에 필요한 농지 구입이나 시설 설치를 위해 최대 5억원 규모의 대출도 병행 지원한다.

해당 대출은 연 1.5% 고정금리로 5년 거치 후 20년간 균등상환 조건이다.

정성아 기자

광주시 '제7기 100인의 아빠단' 모집

광주시는 아빠육아를 실천하는 광주 대표 아빠모임인 '광주 100인의 아빠단' 참여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보건복지부·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와 함께 모집하는 '100인의 아빠단'은 생애 첫 육아를 하거나 육아에 관심이 있는 초보 아빠들이 모여 육아고민과 노하우를 나누는 아빠모임으로, 지난 2019년 시작해 올해로 7기를 맞고 있다.

광주에 거주하며 3~9세(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빠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00인의 아빠단으로 선정되면 아이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소정의 기념품 등을 지원받는다. 또 아빠단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온라인 주간미션 참여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빠들과 육아 경험·노하우를 나누는 네트워크 활동에 함께 할 수 있다. **정성아 기자**

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주의' 하향...방역 지속

추가 발생 방지 수칙 준수 당부
미흡사항 위주 집중 현장교육도

전남도는 10일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봄철 추가 발생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소독 철저 등 차단방역 수칙 지도 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기경보하향은 겨울철새 북상으로 개체 수가 줄고, 전남의 발생 방역지역이 모두 해제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및 확산 위험도가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철새개체수는 올해 1월 16만9000수에서 2월 15만1000수, 3월 7만7000수

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전남 가금농가에서는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5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38% 줄었다. 이는 전국 오리 사육량의 50%를 넘는 상황에서도 겨울철 발생 시기 중 역대 최소 발생, 최소 살처분 등 방역 성과를 거둔 것이다.

전남도는 이번 성과는 발생 위험지역의 오리 사육제한 실시와 가금 농장 차단 방역시설 지원, 차단방역 현장 교육을 통한 농장주 방역의식 개선 등 방역 관계자와 가금농장, 계열사의 강력한 협력체계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과거 철새가 북상한 이후 환경에 남아있는 바이러스가 농장 단위 차단방역이 미흡한 틈을 타 봄철에도 추가로 발생

한 점을 고려해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기 전제 기금의 출하 전 검사체계, 소독 등 행정명령·공고 유지 등 예방 대책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또한 겨울철을 대비해 축사 마당 소독 시설 등을 추가 보강하고, 발생농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위주로 집중 현장 교육을 해 청정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박현식전남도농축산식품국장은 "야외 바이러스가 언제든 농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며 "가금농장에서는 경각심을 잃지 말고 전실 사용 생활화, 축사 출입 시 손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매일 농장 내외부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지역산업 맞춤형 투자유치 활성화"

보조금 지급·제도 개선 논의

전남도는 지역 산업 맞춤형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회계사, 교수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 도청에서 '2025년 제1차 전남도 투자유치협의회'를 개최했다.

전남도 투자유치협의회는 주요 투자유

치 시책과 보조금 지원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제1차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지급(안)과 보조금 개선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기업의 투자유치를 높이고 전남만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산업별·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도비 보조금제도가 더욱 실효성 있게 정비돼 전남의 투자 매력도가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조금과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